<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

동아일보의 용기있는 쾌거?

동아일보가 오랜만에 사건을 저지른 것 같다. 재벌기업 중의 재벌기업인 정유4사의 비리를 용기있게 폭로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간지들은 그동안 보수(사이비?) 언론을 자처, 재벌 및 기득권층의 갖가지 불법비리와 비행을 지켜보면서도 눈감아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아 정론지로서의 희망은 없었다.

동아일보가 막대한 광고비를 뿌리면서 압력을 행사해온 정유4사를 상대로 보수언론으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담합행위 폭로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다. 물론 취재가 석유제품 수입사들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동기가 순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유4사의 담합이나 각종 비리는 어제오늘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지속돼왔다. 정유4사는 그동안 석유제품 가격담합은 물론이고 폴사인제, 석유제품 유통 등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가 석유류 가격을 결정하고, 정유 및 천연가스 수입기업의 수익을 산정할 때는 원유 수입가격 산출, 석유제품 원가계산, 유통비용 산출 등에서 무수한 비리를 저질렀다. 물론 산업자원부(구 동력자원부 포함)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특정 정유사가 원유가격을 잘못 예측해 4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자 석유기금에서 보전해줄 정도이다. 석유기금을 호주머니돈 쓰듯 마음대로 축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 휘발유 판촉비용을 현실성 없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정유4사의 담합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999년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전의 불법과 비리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SK를 비롯해 LG-Caltex정유, 현대정유(한화에너지 포함), S-Oil(구 쌍용정유) 등 국내 정유4사가 판매가격 및 영업활동 담합을 통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을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폭리를 취해왔음은 오래전부터의 관행이지 새삼스럽게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정유4사는 석유제품 가격이 자유화된 뒤에도 형식적으로 회사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 발표한 후 일정기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가격을 단일화시켜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수입사의 수입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별로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을 만들어 운영하며 정유4사 소속의 폴사인제 주유소 판매가격을 특정시기에 단일화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동아일보는 석유 수입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주유소가 폴사인제 주유소보다 싸게 판매하면 정유4사가 공동의 가격대응책 을 펴왔고, 수입사의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 주위의 정유4사 소속 폴사인제 주유소에 한해 가격을 일시적으로 더 낮춰 목표주유소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펴온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유4사는 석유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정제한 석유제품만을 판매해왔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4사는 1999년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럴당 1.7달러로 책정된 수입부과금을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유보다 최소 10%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로비를 벌였고, 산자부는 정유4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석유협회는 배럴당 1.7달러인 수입부과금을 원유에는 종전수준인 리터당 13원으로, 석유제품은 원유와의 가치비율 등을 감안해 29원으로 올려 차이를 리터당 16원 정도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는 원유는 리터당 13원, 석유제품은 19원으로 책정해 6원의 차이를 두기로 결정했다.

정유4사와 산자부가 한식구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자부는 이미 정부 중앙부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4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조사·처벌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그동안에는 정유4사의 담합이나 불법거래, 편법유통, 석유기금 유용 등 불법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유4사가 1조3440

억원 또는 2조119억원의 폭리를 취해왔을 때 공정위 및 산자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산자부와 공정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유비리가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화학저널 2000/7/10>